

# 의정부지방법원 2021. 8. 27. 선고 2021고단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 란)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## 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

결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사건   | 2021고단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 음란), 정보통신망<br>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|
| 피고인  | A   |
| 검사   | 고현욱(기소), 강다룡(공판)  |
| 변호인  | 변호사 장소현(국선)   |
| 판결선고 | 2021. 8. 27.  |

## 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  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  
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  
피고인에 대하여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죄사실

#### 1.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
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, 문언, 음향,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 
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0. 8. 27. 18:29경 불상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 
B(여, 71세)의 휴대전화로 "C야너내가돈받으러간다 C야내가언젠가 너한테 늙은C야너네가한번니얼굴보  
러갈게 늙은C야 수일네로갈게죽지말고기다여"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, 그 무렵부터 2020.  
10. 13.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(1)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 
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.

## 2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, 우편, 컴퓨터,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, 음향, 글, 그림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은 2020. 8. 27. 18:56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(여, 71세)에게 "B씨나당신엄마하고몸을- 언었어그래서당신엄마가나한테자 기야한번만해조그래서속초모텔에 가서해!?"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, 그 무렵부터 2020. 10. 13.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(2)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#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##### 1. C,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##### 1. 문자메시지

### 법령의 적용

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, 제44조의7 제1항 제3호(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도달의 점)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, 포괄하여), 각 징역형 선택

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# 1. 보호관찰

형법 제62조의2

#### 1. 수강명령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

#### 1. 취업제한명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

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

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,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,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.

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
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,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,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,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, 제49조 제1항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

양형의 이유

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월~2년

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[유형의 결정] 디지털성범죄 > 05. 통신매체이용음란 > 통신매체이용음란

[특별양형인자] 없음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4월~10월 [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]

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

피고인은 금전문제로 양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,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.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.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. 다만,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,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황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들인 점,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가정환경, 범행의 동기와 경위, 범행의 수단과 결과,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신정민